

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4. 10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 이유

안전행정부의 권고 등에 따라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높이고 군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수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한 본문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5조를 준용토록 개정(안 제13조)
- 나. 군립도서관의 위탁운영기간 중에도 군수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각 호를 삭제하고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15조를 준용토록 개정(안 제31조)
- 다. 군립도서관의 위탁종료시 수탁기관에게 재산, 시설물 등의 반환 및 기부채납의무를 규정한 본문을 삭제함(안 제32조)
- 라. 준용규정의 조례명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하고, 준용규정에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」를 추가(안 제3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(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5조

(2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1조,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9. 5. ~ 9. 25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군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2조를 삭제한다.

제36조 중 “ 「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”를 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”로 하고, “ 「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 을”을

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</p> <p>2.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3.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</p> <p>4.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등의 내부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</p> <p>5.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군수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31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수탁기관이 제30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</p> <p>2. 수탁기관이 위·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</p> <p>3.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4. 도서관 설립취지에 위반되는 경우</p> <p>5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	<p>제31조(위탁의 취소)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(반환 및 기부채납) ① 수탁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자료, 시설,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</p> <p>제3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도서관법」, 「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제36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「-----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-----.</p>

참고 1**관계법령(발췌)**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 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 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 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(수탁기관의 의무)

-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·개축하거나,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(협약해지 등)

-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

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
 2. 수탁기관이 제8조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
 3.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·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
 4.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-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